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는 없다

8.3.11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개혁과 국민의 참여를 표방하며 출범한 참여정부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인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로드맵을 작성할 때부터였다. 10대 국정과제 선정에서 환경문제를 누락시켰는가 하면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게 되어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3개 위원회와 5개 태스크포스 팀에 개발부처 장관들이 겹치기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열어놓고 있었던 청와대에 대한 환경인의 인로는 막혔다. 어느 기구에도 환경인은 없다. ^{이것이 힘든}

환경인들에게는 아직 기억이 생생한, 작년 여름 성직자들의 새만금 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305km의 뜨거운 아스팔트 노상에서의 3보1배 기도행진과 최근 지울스님의 생태 살리기 장기단식농성에서 보여준 목숨을 건 항거에 대한 정부의 나 몰라라 하는 반응은 환경인들이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였다.

전 정권들이 벌여놓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천성산과 금정산 관동 고속철도 사업 등은 이미 추진 중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어려운 경제를 부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형 개발정책들을 쏟아내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흔적도 없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는 것이다.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목전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남발하고 있는 국토를 볼모로 한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현 세대가 겪고 있는 갈등을 후세대들이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환경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고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철야농성을 하는가 하면 22일부터는 주요 활동가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우선 최고정책결정자의 귀를 열게 하고 환경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두고 사회일각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환경타령이냐고 하는 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350만 농민의 '쌀 사수' 함성을 필두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위한 절규가 뒤섞인 가운데 환경지킴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환경인들이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후손에게 빚을 남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환경인들이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였던 정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깊은 자기 성찰을 하여 이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일상을 벗어던지고 '산중회의'라도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TV 공개토론을 요구하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27일 '환경비상1만인선언환경인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환경을 지키려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는 없다.

박 영 복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인들이 기대를 크게 하였던 개혁의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주요한 참여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시작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로드맵
을 작성할 때부터 시작 되었다. 10대 국정 과제 중 환경은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라
관련장관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3개 위원회 중 하나인 리스크포스팀에 대한
부처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관련 해를 지어지. 영대 대통령
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연로는 부족하다. 예산기부으로 환경부는 없다.

환경인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생생한 주제로 예를 들자면 새바늘 깎기, 생명의 생명과 환경
을 맺어주는 305Km의 두꺼운 산산조각난 산에서 3월 14일 기도행진과 최근 자살사망의
생태살리기 장기관상동맥에서 보여준 폭우를 전 항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산물관리 하는 반응은
환경인들이 참여방식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였다.

전정부들이 법제 동향에 새바늘 깎기, 생명의 생명과 환경 고추장으로 새바늘 등은
이미 추진 중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여권을 경제
를 부양하기는 명분을 내세워 대형 개발 행위를 환경영향을 고려한 혼란으로 없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으로 거치기 않고 먼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참여방식의 환경인식 결핍
현상을 반영하고 드러내 놓는 것이다.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산발하고 있는 중추를 복원으로 하는 반환경
적인 정책들을 실현에 앞장서지 못하면서 우리 후세의 삶에 더 나은 생태계에 있는
산 호수 등 입원생태를 이룬 호수에서 겪고 있는 강들을 후세대들이 산발하게 하는 결과를
남기리라.

이러한 현실을 환경인들이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 선언'
을 출범시키고 광화문 영진빌딩에서 참여동맹 하는 것이라 22일 부터는 주요 활동가들이
단식투쟁에 들어 갔다. 우선 최고정책결정자의 귀를 열게 하고 환경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다.

이른 후고 사회일각에서는 먹고 살기로 힘든데 환경연대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350만 농민의 '쌀 식량' 확보를 필수로 노동과, 시민의 생존권을 위한
전투가 뒤따라야 하는데 환경지킴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경인
들이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후세에게 베푼 남기지 말고 환경을 기억하며 우리 후세에게 재앙을 물려
줄 수 없게 하라는 비유이다.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환경인들이 그동안
이런 이유에서 영진 빌딩에 직접적인 대립을 해왔던 자신들을 되돌아 보며 같은
자기생존을 위해서 전연설 자라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사회, 학계, 정책권으로
에워싸 있다. 모든 입장을 벗어날 수 없는 중추의 리스크 포스팀에 대해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TV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이러한 중추를 리스크 포스팀이다.

오는 11월 24일 '환경비상 1박2일 선언 환경인 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 대회에
환경을 지키려는 국민의 힘을 모아 모두 다같이 보여주기이다.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는 없다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개혁과 국민의 참여를 표방하며 출범한 참여정부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환경인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로드맵을 작성할 때부터였다. 10대 국정과제 선정에서 환경문제를 누락시켰는가 하면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게 되어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3개 위원회와 5개 태스크포스 팀에 개발부처 장관들이 겹치기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열어놓고 있었던 청와대의 환경인을 위한 언로는 막혔다. 어느 기구에서도 환경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 기억이 생생한, 작년 여름 성직자들의 새만금 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305km의 뜨거운 아스팔트 노상에서의 3보1배 기도행진과 최근 지울스님의 생태 살리기 장기단식농성에서 보여준 목숨을 건 항거에 대한 정부의 나 몰라라 하는 반응은 환경인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전 정권들이 벌여놓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천성산과 금정산 관통 고속철도 사업 등은 이미 추진 중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어려운 경제를 부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형 개발정책들을 쏟아내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흔적도 없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는 것이다.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목전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남발하고 있는 국토를 불모로 한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현 세대가 겪고 있는 갈등을 후세대들이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환경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고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철야농성을 하는가 하면 22일부터는 주요 활동가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우선 최고정책결정자의 귀를 열게 하고 환경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두고 사회일각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환경타령이냐고 하는 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350만 농민의 '쌀 사수' 함성을 필두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위한 절규가 뒤섞인 가운데 환경지킴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환경인들이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후손에게 빛을 남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환경인들이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였던 정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깊은 자기 성찰을 하여 이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일상을 벗어던지고 '산중회의'라도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TV 공개토론을 요구하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27일 '환경비상1만인선언환경인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나

서서 환경을 지키려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